임팩트 커넥터 변화를 잇는 사람들 2026년 11월 3주

약속의 숫자에서 받는 쪽 몫은 가장 늦게, 가장 작게 적히는 것으로 읽힌다

미국 주민투표 41건 중 40건이 데이터센터 규제 쪽으로 났고 오픈AI는 시설별 영향 공개를 약속했다. 인디텍스는 협력사 감축 설비 펀드에 5천만 달러를 넣기로 약정했다. 공시에서는 숫자를 재무제표와 맞춰 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한국 사회연대금융 첫 예산 413억 원은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1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비는 적어 내도 주민 몫은 빠뜨리기도 한다 2쪽

2 원청이 협력사 탄소 감축 비용을 나눠 지는 쪽으로 기운다 3쪽

3 공시 대상은 줄고, 남은 숫자는 재무제표와 맞춰 보는 쪽으로 5쪽

4 넷제로 목표를 고친 기업이 안 고친 기업보다 정직할 수 있다는 지적 5쪽

5 한국 사회연대금융 새 돈줄은 예산 안에, 영국은 연기금이 주택으로 6쪽

6 사회적 가치를 점수로 사는 공공조달, 한국 지침엔 아직 숫자가 없다 6쪽

7 한 임팩트 보고서 6,540억 원의 77%는 재무제표의 배당·세금 7쪽

이번 주의 숫자

40/41
미국 데이터센터 주민투표 중 금지·규제 쪽(산케이 집계)

7%
인디텍스 공급망 배출 감축률, 2018~2025년(목표 51%)

4.5억 유로
네덜란드 공시 의무 매출 기준(직원 1천 명과 함께)

20/43
세계 최대 기업 중 목표를 약화한 흔적이 보인 곳

413억 원
국회 심사대에 오른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금융 예산

77%
두나무 임팩트 6,540억 원 중 배당·법인세 몫

1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비는 적어 내도 주민 몫은 빠뜨리기도 한다

40/41
미국 데이터센터 주민투표 중 규제 쪽(산케이 집계)

산케이 보도로는 11월 3일 미국 10개 주에서 데이터센터를 두고 치른 주민투표 41건 가운데 1건을 빼고 모두 건설 금지나 규제 강화가 가결됐다. 상당수는 시내나 공유지에만 효력이 있어 교외·사유지 계획에는 효과가 작다는 견해도 함께 나왔다. 오픈AI는 직접 소유·운영하는 시설에 한해 보안·영업비밀을 뺀 사안에서 공직자와 비밀유지계약을 맺지 않고, 소음·용수·에너지 비용 영향을 시설별로 공개하고 이행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파트너가 짓는 시설에도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제데이터센터기구는 11월 9일 지역사회 영향을 4개 영역 12개 항목으로 평가해 1~100점을 매기고, 운영 중 주민 반응을 따로 쌓는 인증을 내놓았다. 이 기구 집계로 2024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미국 20개 주에서 46개 사업, 1,700억 달러어치가 주민 반대로 멈추거나 늦어졌다. 말레이시아 조호르에서는 65개 사업이 인허가 단계에 있고, 일부 주민은 집을 내놓거나 팔 생각을 한다. 한 교수는 200~300m 떨어진 집에 위험한 전자파 노출이 있다는 일괄 결론은 과학이 받치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이 치르는 비용이 사업 위험으로 계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읽힌다.

구글은 11월 2일 말레이시아에서, 5일 와이오밍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요금을 모두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수장 발표에는 시공사가 앞서 밝힌 주민 몫 물 25%가 없었다. 사업자가 먼저 적어 내는 숫자는 전력비처럼 자기 쪽 비용이고, 주민에게 돌아갈 몫은 빠지기도 하는 것으로 읽힌다. 한국에서도 유치 협약 단계에서 주민 몫 숫자를 따로 묻게 될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스스로 내는 숫자는 자기 비용 쪽에 몰린다. 주민 몫 물·일자리 숫자를 문서에 먼저 적어 두면 협상 자리를 사업자와 지역이 함께 쥘 것으로 본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기업의 ESG 담당자는 이번 달 안에 국내 부지별 전력·용수·소음 수치와 주민 몫 물·일자리 약속, 연 1회 이행 보고 계획을 지역 공개용 문서로 만든다.

2 원청이 협력사 탄소 감축 비용을 나눠 지는 쪽으로 기운다

7%
인디텍스 공급망 배출 감축률, 2018~2025년

자라 모회사 인디텍스는 협력사 감축 설비에 장기대출을 주는 펀드에 5천만 달러를 넣기로 했다고 지구환경기금이 11월 10일 밝혔다. 국제금융공사도 최대 6천만 달러를 넣고, 지구환경기금의 1,380만 달러가 가장 먼저 손실을 진다. 목표는 4억 달러, 10년간 60개 기업에 대출해 300만 톤을 줄이는 것이다. 1차 모집 목표는 2억 2,500만 달러이고, 전체 목표액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로지텍은 협력사 17곳이 재생전력을 함께 사게 돕고 감축 실적을 정기 사업 평가에 넣는다.

요구만으로는 공급망 배출이 잘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디텍스의 감축목표 대상 공급망 배출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 줄었고, 자사 사업장·구매전력 배출은 88% 줄었다. 2030년 목표 51%까지 남은 5년에 해마다 약 9%포인트를 줄여야 하는데, 지난 7년은 해마다 1%포인트 남짓이었다(이 지면 계산). 방글라데시 의류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66억 달러가 드는데 확보됐거나 조달이 예상되는 돈은 18억 달러다. 버버리·샤넬 등 명품 7곳은 협력사 감축 투자 평가 틀을 무료로 내놓고, 에너지비가 운영비의 약 40%인 코모 섬유단지의 재생전력 공동구매를 검토한다.

네덜란드 정부가 11월 11일 하원에 낸 공시법 수정안은 옴니버스로 바뀐 유럽 지침을 따라 가치사슬 기업을 대기업의 무제한 정보 요구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를 더 묻기보다 비용을 나눠 지는 쪽으로 원청의 일이 옮겨 가는 것으로 읽힌다. 국내 수출 협력사도 원청의 지원 프로그램과 평가 점수를 함께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원청이 비용을 나눠 지면 협력사의 감축 실적은 거래 평가 점수가 될 것으로 본다. 지원 프로그램에 먼저 든 협력사는 설비 자금과 평가를 함께 챙길 수 있고, 늦으면 평가 항목으로만 만날 것으로 본다. **글로벌 원청에 납품하는 국내 협력사 ESG 담당자는 이번 달 안에 원청별 감축 지원 조건(공동구매·장기대출·평가 반영)을 견주고 참여할 프로그램을 정한다.**

1번 변화에 붙여

약속 장부는 사업자 발표보다 시공사·파트너 칸부터 채운다

말레이시아 정수장 발표에서 빠진 주민 몫 물 25%는 시공사가 앞서 밝힌 숫자였다. 오픈AI의 약속도 직접 소유·운영하는 시설에 한정되고 파트너가 짓는 시설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흔한 실수는 사업자 발표 한 장으로 약속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다. 데이터센터 사업을 맡은 ESG 담당자나 그 자산에 투자하는 실무자라면 약속 장부를 사업자·시공사·파트너 세 칸으로 나눠, 누가 언제 어떤 숫자를 말했는지부터 모아 볼 만하다. 뒤 발표에서 앞선 숫자가 사라지면 그 칸이 바로 비어 보인다.

다음 순서는 빈칸에 점수표를 대 보는 것이다. 국제데이터센터기구의 인증은 지역사회 영향을 4개 영역 12개 항목으로 매기고 운영 중 주민 반응을 따로 쌓는다. 인증을 받기 전이라도 이 항목을 점검표로 빌려 스스로 채워 보면 주민 설명회 전에 답이 없는 질문을 먼저 알 수 있다. 주민 반응을 받는 창구를 착공 전에 열어 두는 것도 같은 틀에서 빌려 올 만하다. 투자자라면 실사 질문에 공직자와 비밀유지계약을 맺었는지를 한 줄 더해 볼 만하다.

2번 변화에 붙여

협력사라면 에너지비 비중으로 대출과 공동구매를 갈라 본다

원청이 내놓는 지원은 두 갈래로 보인다. 인디텍스 펀드처럼 감축 설비에 장기대출을 주는 길과, 로지텍처럼 협력사가 재생전력을 함께 사게 돕는 길이다. 협력사 ESG 담당자라면 둘을 고르기 전에 자기 공장 운영비에서 에너지비가 차지하는 몫부터 적어 볼 만하다. 기준점은 공동구매를 검토하는 코모 섬유단지의 약 40%다. 그 숫자에 가깝다면 공동구매에 함께 들 길부터 알아보고, 공정 설비를 바꿔야 줄어드는 배출이라면 장기대출 쪽이 맞을 것으로 본다.

흔한 실수는 감축 실적이 평가에 들어간다는 말만 듣고 자료 제출부터 늘리는 것이다. 네덜란드 수정안은 유럽 공시 의무가 남은 대기업의 무제한 정보 요구에서 가치사슬 기업을 보호한다. 그런 원청과 거래한다면 자료 묶음보다 설비 투자안 한 건을 먼저 내미는 편이 협상에 낫다고 본다. 투자안의 틀은 명품 7곳이 무료로 내놓은 협력사 감축 투자 평가 틀을 의류가 아닌 업종에서도 빌려 쓸 만하다. 원청 쪽 담당자라면 지구환경기금이 가장 먼저 손실을 지는 구조처럼, 자금을 다 대기보다 위험을 지는 층을 공공·국제기관과 나눠 짜 볼 만하다.

3 공시 대상은 줄고, 남은 숫자는 재무제표와 맞춰 보는 쪽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시 외부검증 공통기준 초안 의견을 1월 18일까지 받는다. 검증인은 이중 중대성 판단 과정을 보고, 친환경 사업 수치를 회사 재무제표와 맞춰 볼 수 있다. 네덜란드는 2027 회계연도부터 매출 4억 5천만 유로와 직원 1천 명을 모두 넘는 기업만 보고하게 법안을 고쳤다. 유로 스톡스 600 상장사 가운데 작은 곳은 검증비가 재무감사비의 30~43%로 큰 곳(1~5%)보다 무겁다는 연구도 나왔다. 미국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의 공급망 배출·기후위험 공시를 멈추고 직접 배출과 구매 전력 배출(Scope 1·2) 공시는 남겼다. 싱가포르는 2028 회계연도부터 공시를 재무제표와 함께 내도록 제안했다. 범위는 줄고 남은 숫자는 재무와 묶이는 것으로 읽힌다.

보고 대상이 줄어도 검증인이 재무와 맞춰 볼 숫자는 남을 수 있다. 회계와 이어진 수치의 쓸모가 커질 것으로 본다. **국내 공시 준비 담당자는 이번 달 결산 일정을 짤 때 친환경 매출·투자 수치를 회계 계정과 맞춰 보는 작업을 결산 항목에 넣는다.**

---

4 넷제로 목표를 고친 기업이 안 고친 기업보다 정직할 수 있다는 지적

넷제로 트래커 조사에서 세계 최대 기업 50곳 중 목표가 있는 43곳의 20곳이 목표를 약화한 흔적을 보였고, 금융사는 18곳 중 11곳이었다. 연구자는 목표를 고치는 편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며, 배출이 25%·18% 늘고도 2030 목표를 유지한 마이크로소프트·구글을 짚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9 탄소중립을 생산·사용·가치사슬 감축률로 나누고 넷제로를 2049년으로 잡았다. 영국 표준기관 BSI의 일본 법인은 11월 5일 전환계획 제3자 인증을 내놓고 해마다 감사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 변화를 이끌 64개 수단을 물은 전문가 610명 조사에서 자발적 보고는 꼴찌였다. 후퇴만 세면 목표를 손본 회사가 벌을 받는 셈으로 읽힌다.

후퇴 집계는 정직한 수정도 후퇴로 센다. 고친 이유와 중간 실적을 함께 적은 회사만 그 집계 앞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임팩트 투자사 ESG 담당자는 이번 달 투자처 기후 목표 점검표에 목표 수정 이력과 그동안의 배출 증감을 나란히 적는 칸을 더한다.**

5 한국 사회연대금융 새 돈줄은 예산 안에, 영국은 연기금이 주택으로

국회 예산 심사에서 일부 야당이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금융 예산 413억 원이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자, 현장 단체들이 10·11일 철회를 요구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정부안의 이 413억 원과 청년 일경험·사회적기업 성장고도화를 마중물로 꼽았고, 성장고도화에는 임팩트 투자 매칭과 모태펀드 출자가 새로 생겼다. 영국 사회적 임팩트 투자는 2025년 말 132억 파운드로 17% 늘었고, 가장 큰 몫(55%)인 사회·저렴주택 투자의 성장은 지방공무원연금 등 연기금·보험 자본이 이끌었다. 한국의 새 돈줄도 예산 안에서 생겼고, 모자란 것은 연기금이 살 자산 쪽으로 읽힌다.

새 돈줄이 모두 예산 안에 있으면 심사 결과에 함께 묶인다. 연기금이 살 만한 장기 자산을 만들면 예산 밖 돈줄이 생길 것으로 본다. **사회주택·돌봄에 대출하는 사회적금융 기관 담당자는 이번 달 국회 심사 기간에 예산이 줄면 영향받을 대출 건수·금액을 정리해 협의체와 의원실에 낸다.**

---

6 사회적 가치를 점수로 사는 공공조달, 한국 지침엔 아직 숫자가 없다

얼라이언스 기고에 따르면 영국은 2027년 1월부터 500만 파운드 넘는 중앙정부 계약에서 고용·기술 성과를 최소 20% 비중으로 평가하고 계약 중에도 점검한다. 유럽연합은 품질 비중 최소 30%를 제안했고, 스페인은 2033년까지 대상 절차 모두가 환경 기준을 하나 이상 넣는 방안을 따져 보게 하는 22개 조치를 승인했다. 한국은 기본법에 공공서비스 위탁 때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 고려할 근거가 생겼지만 통합돌봄 등 복지부 사업 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법은 12월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16일 시행된다.

우선 고려가 배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위탁 심사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몫은 정해지지 않는다. 복지부 지침과 시행령이 그 숫자가 들어갈 자리로 본다.
사회연대경제 협의체 정책 담당자는 이번 달 안에 영국 20%·유럽연합 품질 30% 사례를 붙여 위탁 평가 배점 하한을 적은 의견서를 써 12월 입법예고 때 낸다.

7 한 임팩트 보고서 6,540억 원의 77%는 재무제표의 배당·세금

10일 보도에 따르면 두나무는 2025년 경제·사회·환경 가치를 6,540억 원으로 환산한 임팩트 보고서를 냈다. 그중 경제적 기여 5,025억 원은 현금배당 총액과 법인세비용을 더한 값으로, 계산하면 약 77%다. 사회공헌 122억 원은 총액의 2%가 안 된다(이 지면 계산). 유럽연합 검증기준 초안이 재무제표와 맞춰 보게 한 것은 친환경 사업 수치이고 화폐 환산 보고서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같은 잣대를 대면 총액에서 재무제표 몫이 먼저 갈라질 것으로 본다.

총액만 내면 배당과 세금이 사회적 가치처럼 읽힌다. 항목을 갈라 두면 같은 지표로 비교받을 때 설명이 선다. **임팩트 보고서를 내는 기업 ESG 담당자는 이번 달 다음 판 목차를 잡을 때 화폐 환산 총액을 재무제표 숫자와 그 밖의 성과로 나눠 적는다.**

이슈 1

임팩트 투자 1.76조 달러, 돈은 큰 기관에 몰렸다

> 세계임팩트투자네트워크(GIIN) 추산으로 세계 임팩트 투자는 2025년 말 1조 7,600억 달러이고, 최근 연 성장률은 약 6%로 내려왔다. 응답 기관의 28%가 임팩트 자산의 93%를 운용하며, 큰 투자자는 성숙한 기업에, 작은 투자자는 초기 기업에 주로 돈을 넣는다.

국내 임팩트 운용사라면 이번 달 출자 제안서의 시장 설명을 성장률보다 자금이 몰린 구조로 바꿔 써 볼 만하다. 성장이 느려진 시장에서 큰 기관이 성숙한 기업에 머문다면, 초기 기업에 들어가는 작은 운용사는 그 비어 있는 단계를 맡는 자리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출자자에게는 초기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숫자와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설득에 낫다. 반대로 큰 기관의 임팩트 담당자라면 직접 투자 대신 작은 운용사와의 공동투자나 위탁 운용으로 초기 단계를 담는 방법을 견줘 볼 만하다.

이슈 2

블룸버그, 지속가능채권 8,000종의 쓰임과 성과를 한 표로

> 임팩트온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10일 지속가능채권 8,000종의 사후보고를 모아 자금배분 22개·성과 15개, 모두 37개 공통 지표로 비교하는 데이터를 내놨다. 발행사마다 양식과 단위가 달라 투자자가 보고서를 따로 가공해야 했던 일을 줄이려는 것이다.

녹색·사회적채권을 낸 국내 발행사의 담당자라면 이번 달 지난 사후보고서를 이 37개 지표 틀에 맞춰 다시 읽어 볼 만하다. 투자자가 공통 표로 견주기 시작하면 지표 정의가 다르거나 빈칸이 많은 발행사가 표에서 먼저 눈에 띌 것으로 본다. 다음 보고서를 쓰기 전에 자금배분은 22개 항목 가운데 어디에 넣을지, 성과는 15개 가운데 어떤 단위로 낼지를 미리 맞춰 두면 다시 쓰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채권 투자자라면 보유 채권의 사후보고 빈칸을 이 표로 먼저 추려 발행사와 이야기할 순서를 정해 볼 만하다.

이슈 3

임팩트 측정 자료를 투자처가 쓸 만큼만 받자는 제안

> NextBillion 기고에서 측정 실무자인 필자들은 모이는 임팩트 자료 대부분이 의사결정에 쓰이지 않고 투자자 요구를 채우는 데 그친다고 봤다. 지난 3월 몬트리올 전문가 모임 논의를 바탕으로, 투자처를 임팩트의 주체로 대하고 수집 부담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운용사의 측정 담당자라면 이번 달 연말 보고 양식을 보내기 전에 지표마다 투자처가 그 숫자로 무엇을 결정하는지 한 줄씩 물어 볼 만하다. 답이 없는 지표는 빼거나 해를 걸러 받고, 대신 투자처가 이미 운영에 쓰는 지표를 그대로 받아 쓰는 편이 수집 부담과 누락을 함께 줄일 것으로 본다. 소셜벤처 창업자라면 거꾸로 투자사에 지표를 줄이자고 제안할 때, 자기 회사가 실제 결정에 쓰는 지표 목록을 먼저 내밀어 볼 만하다. 빼자는 요청보다 바꿔 쓰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기 쉬울 것으로 본다.

이슈 4

한화생명, 기후 손실액은 냈지만 취약 자산 규모는 비웠다

> 임팩트온 보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2050년 기후위험 손실을 3.0℃ 시나리오 기준 최대 2조 2,110억 원으로 추산했다. 분석 대상 자산은 약 19조 2,000억 원이지만, 그중 취약 자산의 금액과 비중, 내부탄소가격 적용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의무 공시를 앞둔 국내 금융사 ESG 담당자라면 이번 달 자사 시나리오 분석을 손실액 한 줄과 노출 자산 표 한 장으로 나눠 놓고 둘째 장이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만하다. 손실액만 있고 노출 자산이 없으면 투자자는 그 숫자가 어느 자산에서 나왔는지를 되물을 것으로 본다. 내부탄소가격은 쓰고 있다면 적용 범위를, 쓰지 않는다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는 편이 빈칸으로 두는 것보다 설명이 선다. 보험사라면 분석 대상 자산을 정한 기준을 한 문단 덧붙이는 것도 값싼 보완이다.

이슈 5

스페인 세 번째 권고, 간소화 기준과 검증 기준까지 짚었다

> Compromiso Empresarial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증권시장위원회와 회계감사기관은 CSRD 전환이 늦어지자 세 번째 공동 권고를 냈다. 직원 1,000명 넘는 대상 기업은 2026 회계연도 보고서를 간소화된 유럽 기준(ESRS)으로 쓰고, 검증인은 ISSA 5000 등을 참고하라고 했다.

유럽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공시 담당자라면 이번 달 현지 검증인에게 올해 보고서에 어떤 검증 기준을 쓸지 먼저 물어 볼 만하다. 법 전환이 늦은 나라에서도 감독 당국이 간소화 기준과 ISSA 5000을 함께 짚었다면, 보고서를 무엇으로 쓸지와 함께 무엇으로 검증받을지도 미리 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호 공시 꼭지의 네덜란드 직원 1천 명 기준과 나란히 놓고, 법인이 있는 나라마다 대상 기준과 검증 기준을 한 표로 적어 두면 결산 때 다시 찾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국내 검증 실무자라면 ISSA 5000 항목을 고객 보고서 점검표에 미리 대 봐 둘 만하다.

이슈 6

인도네시아 내년 ISSB 공시, 니켈 피해엔 시장 가격이 없다

> Responsible Investor 기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ISSB 기반 공시기준이 2027년 1월 1일 시행되고, 개정 초안은 독립 검증 의무를 더한다. 니켈 산지 피해에는 시장 가격이 없고, 라자암팟 니켈 조달 여부를 질문받은 기업 24곳 가운데 답한 곳은 현대차뿐이었다.

인도네시아 니켈이 들어가는 배터리·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실무자라면 이번 달 실사 목록에 투자처가 니켈 산지 현장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지 묻는 질문을 더해 볼 만하다. 시행 뒤 현지 기업이 공시를 내더라도 시장 가격이 없는 피해는 공시에서 빈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질문받은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답한 곳이 국내 완성차라는 점은, 국내 공급망에 조달지를 밝힌 선례가 이미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내 배터리 협력사의 ESG 담당자라면 그 수준의 확인을 요구받기 전에 니켈 조달 지역과 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둘 만하다.

이슈 7

케냐 KOKO 파산, 상대국의 이전 감축량 몫이 먼저였다

> ESG Today 기고에 따르면 저소득 150만 가구에 바이오에탄올을 보급하던 케냐 KOKO는 탄소 크레딧 수익에 기댔지만 승인서를 받지 못해 올해 1월 31일 문을 닫았다. 케냐 정부는 KOKO가 팔려던 양이 국제 이전 감축량 배정분을 다 써 버린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외 감축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 감축 실적을 사려는 국내 실무자라면 이번 달 실사 목록에 상대국이 국제 이전용으로 정해 둔 감축량이 얼마이고 이미 얼마나 승인됐는지를 묻는 항목을 넣어 볼 만하다. 한 사업이 그 몫을 다 쓰려 하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례에서 읽힌다.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승인 신청량을 나눠 받는 방법이나, 이전 승인이 없어도 남는 수익 길을 함께 짜 두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본다. 사회적 성과를 함께 보고하는 운용사라면 사업이 멈췄을 때 수혜 가구가 어떻게 되는지도 위험 항목에 넣어 볼 만하다.

이슈 8

일본 배출권, 15% 넘긴 이월은 뒤 할당에서 뺀다

> Sustainable Japan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소위원회는 10월 27일 GX-ETS 배출권 이월 상한 사무국안을 냈다. 2029년도 할당부터 2년 전 할당량의 15%를 넘겨 이월하면 그만큼 이후 할당에서 뺀다. 거래 시장은 2027년도 가을쯤 열릴 예정이다.

국내 배출권을 운용하는 기업의 ESG·재무 담당자라면 이번 달 자사의 이월 계획을 정리할 때 일본안을 비교 칸으로 붙여 볼 만하다. 이월을 막지 않고 넘친 만큼 뒤 할당에서 깎는 방식은 배출권을 쌓아 두는 전략에 값을 매기는 설계로 읽힌다. 같은 방식이 다른 제도에 들어오면 남는 해에 배출권을 파는 쪽이 유리해질 수 있으니, 해마다 남는 양과 쌓아 둔 양을 지금 표로 나눠 두면 계산이 빠를 것으로 본다. 일본에 사업장을 둔 회사라면 시장이 열리기 전인 지금 현지 사업장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둘 만하다.

이슈 9

HSBC, 외부 ESG 평가 하나로 대출 조건을 정한다

> Sustainable Japan 보도에 따르면 HSBC는 유럽 대륙 중소·중견기업에 외부 ESG 평가와 대출 조건을 잇는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기업마다 지표를 짜는 부담을 덜고 해마다 평가에 따라 조건을 조정하며, 국제 원칙을 따르는 지속가능연계대출과는 다른 상품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ESG 담당자나 중소기업 대상 임팩트 대출을 짜는 실무자라면 이번 달 자사 연계대출 상품이 기업마다 지표를 따로 짜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하다. 작은 기업에는 그 설계 비용이 문턱이 되기 쉽고, 외부 평가 점수 하나에 조건을 묶는 방식이 그 문턱을 낮추는 대안으로 읽힌다. 다만 HSBC가 스스로 국제 원칙 상품과 선을 그었듯, 같은 설계를 쓴다면 상품 이름과 설명에서 지속가능연계대출과 구분해 적는 편이 과장 시비를 줄일 것으로 본다. 어느 평가기관의 점수를 받을지 먼저 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이슈 10

이탈리아 은행재단, 저렴한 주택과 기숙사에 가장 많이 들어갔다

> 이탈리아 지속가능금융포럼 조사에서 은행에 뿌리를 둔 재단 44곳 가운데 ESG 기준 운용 재단이 33곳에서 35곳으로 늘었다. 29곳이 주거·도시재생에 자원을 배정했고, 쓰임은 저렴한 주택 20곳, 학생 기숙사 17곳, 도시재생 15곳 순이었다.

국내 사회주택·청년주거 사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운용사라면 이번 달 출자자 후보 목록에 공익재단을 한 줄 넣고, 재단의 사업 주제가 주거·청년과 겹치는지부터 견줘 볼 만하다. 이탈리아 재단들이 저렴한 주택과 기숙사를 가장 많이 고른 것은 자산 운용과 재단의 목적이 주거에서 함께 맞기 쉽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호 임팩트 금융 꼭지가 짚은 연기금이 살 자산 문제와 맞대면, 재단은 연기금보다 작은 규모로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출자자로 본다. 제안서에는 재단의 목적과 이어지는 성과 지표를 한두 개만 붙이는 편이 낫다.

이슈 11

검증비 2,000만 원이면 1,000톤을 팔아야 본전이라는 셈

> 임팩트온 인터뷰에서 오대균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은 정부의 기후테크 기업 1,000개 육성 계획을 두고, 감축실적 100톤을 톤당 2만 원에 팔면 200만 원인데 검증비가 2,000만 원이면 사업이 어렵다고 했다. 작은 사업을 묶어 검증비 부담을 줄이자고 했다.

감축실적을 수익으로 잡은 기후테크 소셜벤처 창업자라면 이번 달 사업계획서에 검증비를 되찾으려면 몇 톤을 팔아야 하는지 한 줄로 계산해 넣어 볼 만하다. 인터뷰의 셈대로라면 검증비 2,000만 원은 톤당 2만 원에서 1,000톤어치다. 그 숫자가 한 해 감축량보다 크면 감축실적은 덤으로 두고 서비스나 제품 판매를 주 수익으로 세우는 편이 투자 심사에서 설명이 설 것으로 본다. 임팩트 투자자라면 투자처 여럿의 작은 감축 사업을 묶어 한 번에 검증받는 방법을 운용사 차원에서 견줘 볼 만하다.

이슈 12

은행 61곳, 플라스틱 오염 상위 4사 대출 2,190억 달러

> ExpokNews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보고서는 금융기관 61곳이 2019년~2025년 5월 플라스틱 오염 주요 기업으로 지목돼 온 소비재 4사에 2,190억 달러를 빌려줬다고 집계했다. 기사가 인용한 LSE 평가에서 은행 넷제로 약속 평균 점수는 33%에서 22%로 내려갔다.

기관투자자나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 담당자라면 이번 달 보유 은행주와의 대화 계획에 질문 하나를 넣어 볼 만하다. 대출 기준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가. 약속 점수가 내려가는 가운데 플라스틱 오염 기업 대출은 탄소 목표 밖에 놓이기 쉽다고 본다. 국내 은행이 이 집계에 들었는지는 기사로 알 수 없으니, 국내 운용사는 거래 은행에 직접 물어 보는 것이 첫 걸음이다. 국내 소비재 기업의 ESG 담당자라면 거래 은행이 이런 질문을 받기 시작할 때를 생각해 자사 플라스틱 사용량 자료를 먼저 내놓을 수 있게 준비해 둘 만하다.

위 내용에는 편집진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움직인 것

삼성SDS는 11월 2일 구미에서 60MW AI 데이터센터를 착공했다. 최대 120MW까지 넓힐 수 있게 설계했고 2028년 말 준공이 목표다.

한국사회연대경제와 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9일 국회 토론회에서 2027년 정부 예산안을 부처별로 분석했다.

신나는조합은 성실히 갚고 사회적가치 목표를 이루면 이자를 모두 돌려주는 연 1% 대출(최대 3천만 원) 신청을 22일까지 받는다.

한국표준협회는 18일 원청 공급망 평가조건과 거래 차질 사례를 다루는 중견기업 임원 세미나를 연다.

전망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의결한 2027년 예산에서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금융 예산(전담기관 출연)이 정부안 413억 원보다 줄어든다

25%

일부 야당이 삭감을 거론했고 현장 단체가 반발했다. 다만 기본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고 정부안에 실린 첫해 예산이라 원안 유지 쪽이 더 크다고 본다. 견줄 과거 사례가 적어 거친 숫자다. 본회의 의결 예산의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 사업 금액이 413억 원 미만이면 맞음, 이상이면 틀림. 연말까지 미의결이면 보류.

지난 전망 점검

지난 호 전망: 12월 31일까지 비코프·베네핏 기업을 제목에 쓴 국내 기사가 2곳에서 2건 이상(11월 7일 이후). 11월 13일까지 0건이다.

지난 호는 영국이 인권실사 의무화로 공개에서 행동으로 옮겨 간다고 썼다. 이번 주 영국은 산림파괴 연계 원자재 공급망 점검안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같은 쪽으로 한 걸음 더 간 것으로 읽는다.

이번 주 짧게

도쿄해상은 국제금융공사·블루오차드의 신흥국 채권 펀드에 앵커로 3억 달러를 넣었다. 2013년부터 국제금융공사 위험을 보험으로 받아 왔다.

지속가능 펀드에 3분기 65억 달러가 순유입됐지만 새 펀드 출시는 계속 줄었다(모닝스타).

알버트하인은 바나나에서 해 온 생활임금 격차 줄이기를 망고·콩·아보카도로 넓혔다.

편집장의 글

이번 주 일곱 가지 가운데 넷은 약속의 숫자에서 받는 쪽 몫이 늦고 작게 적히는 자리라고 읽는다. 데이터센터 발표에서 빠진 주민 몫 물, 필요액에 못 미치는 협력사 감축 자금, 배점이 없는 위탁 우선 고려, 6,540억 원 가운데 2%가 안 되는 사회공헌이 그렇다. 나머지 셋은 그 숫자를 받칠 장치의 자리다.
재무제표와 맞춰 보자는 공시, 고친 이력까지 봐야 하는 넷제로, 예산 밖 돈줄이 아직 없는 사회연대금융이다. 사회연대금융 예산은 국회 심사 중이고 위탁 우선 고려는 시행령을 기다린다. 한 주의 자료라 굳어진 흐름이라 하기는 이르다.
다음 주에는 국회 예산 심사에서 사회연대금융 413억 원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국내 데이터센터 소식에 용수량과 주민 몫 숫자가 붙는지를 본다.

1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비는 적어 내도 주민 몫은 빠뜨리기도 한다

투표는 ITmedia가 실은 산케이 기사, 협약은 DCD, 구글·점수제는 임팩트온. 주민 몫이 빠진다는 것은 이 지면의 읽기. 내년 6월까지 새 부지 발표 2건 이상에 주민 몫 수치가 실리면 틀린다.

ITmedia (일본, 11월) · Data Center Dynamics (영국, 11월) · 임팩트온 (한국, 11월) · AsiaOne (싱가포르, 11월) · 임팩트온 (한국, 11월) · ITmedia (일본, 11월)

2 원청이 협력사 탄소 감축 비용을 나눠 지는 쪽으로 기운다

펀드는 지구환경기금 발표, 감축률은 인디텍스 2025년 실적(둘 다 임팩트온), 로지텍은 ESG다이브. 분담 쪽이라는 것은 이 지면의 읽기. 내년 말까지 펀드가 1차 목표를 못 채우면 틀린다.

임팩트온 (한국, 11월) · ESG Dive (미국, 11월) · 임팩트온 (한국, 11월) ·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11월)

3 공시 대상은 줄고, 남은 숫자는 재무제표와 맞춰 보는 쪽으로

검증기준은 이탈리아, 네덜란드 법안·검증비 연구는 네덜란드, 캘리포니아는 미국, 싱가포르는 현지 매체. 재무와 묶인다는 것은 이 지면의 읽기. 2028 회계연도 전 최종 기준에서 재무 대조 절차가 빠지면 틀린다.

ESG News (이탈리아, 11월) ·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11월) ·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11월) · Eco-Business (싱가포르, 11월) · ESG Today (미국, 11월)

4 넷제로 목표를 고친 기업이 안 고친 기업보다 정직할 수 있다는 지적

후퇴 집계·연구자 말은 트렐리스, 인증은 일본 업계지, 전문가 조사는 아르헨티나 매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 지면의 읽기. 2027년 집계에서 목표를 고친 20곳의 배출 감축이 안 고친 23곳보다 작으면 틀린다.

Trellis (미국, 11월) · ESG Today (미국, 11월) · Sustainable Japan (일본, 11월) · ComunicaRSE (아르헨티나, 11월)

5 한국 사회연대금융 새 돈줄은 예산 안에, 영국은 연기금이 주택으로

예산 논란은 라이프인, 마중물은 이로운넷, 영국은 파이오니어스포스트. 모자란 것이 자산이라는 것은 이 지면의 읽기. 내년 안에 사회주택 대출 묶음이 나왔는데도 연기금이 사지 않으면 자산 탓이 아니라 틀린다.

라이프인 (한국, 11월) · 이로운넷 (한국, 11월) · Pioneers Post (영국, 11월)

6 사회적 가치를 점수로 사는 공공조달, 한국 지침엔 아직 숫자가 없다

영국·유럽연합은 얼라이언스 기고, 스페인은 정부 발표 보도, 한국은 토론회 보도. 시행령이 숫자 자리라는 것은 이 지면의 읽기. 시행령에 배점 기준이 이미 담겨 나오면 틀린다.

Alliance (영국, 11월) · Diario Responsable (스페인, 11월) · 이로운넷 (한국, 11월)

7 한 임팩트 보고서 6,540억 원의 77%는 재무제표의 배당·세금

두나무 수치는 플래텀, 77%는 이 지면 계산, 검증기준은 이탈리아 업계지. 갈라질 것이라는 것은 이 지면의 읽기. 내년 상반기 국내 다른 환산 보고서 두 곳의 재무 몫이 절반 아래면 한 회사의 일로 끝난다.

플래텀 (한국, 11월) · ESG News (이탈리아, 11월)

이슈 1 임팩트 투자 1.76조 달러, 돈은 큰 기관에 몰렸다

GIIN 2026년 보고서를 다룬 두 매체 보도에 기댄 해석. 내년 국내 출자 사업에서 초기 단계 전용 출자가 늘지 않고 큰 운용사 쪽으로만 몰리면 이 설명 방식의 쓸모는 작다.

Pioneers Post (영국, 10월) · Impact Entrepreneur (미국, 11월)

이슈 2 블룸버그, 지속가능채권 8,000종의 쓰임과 성과를 한 표로

블룸버그 데이터 출시를 다룬 임팩트온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국내 발행사 채권이 이 데이터에 거의 들어 있지 않다면 국내 발행사에게는 당장 쓸모가 작다.

임팩트온 (한국, 11월)

이슈 3 임팩트 측정 자료를 투자처가 쓸 만큼만 받자는 제안

측정 실무자 모임 결과를 정리한 NextBillion 기고에 기댄 아이디어. 투자사가 출자자 보고 때문에 지표를 줄일 수 없다면 첫 제안은 지표 교체보다 추가에 그칠 수 있다.

NextBillion (미국, 10월)

이슈 4 한화생명, 기후 손실액은 냈지만 취약 자산 규모는 비웠다

한화생명 보고서를 점검한 임팩트온 기사에 기댄 아이디어. 국내 공시 기준 최종안이 취약 자산 규모를 요구하지 않으면 둘째 장의 급함은 덜하다.

임팩트온 (한국, 11월)

이슈 5 스페인 세 번째 권고, 간소화 기준과 검증 기준까지 짚었다

스페인 두 기관의 세 번째 공동 권고를 다룬 Compromiso Empresarial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연말 전에 스페인이 CSRD 전환을 마치고 다른 검증 기준을 정하면 이 표의 스페인 칸은 바뀐다.

Compromiso Empresarial (스페인, 10월)

이슈 6 인도네시아 내년 ISSB 공시, 니켈 피해엔 시장 가격이 없다

투자자문 기관 소속 필자의 Responsible Investor 기고에 기댄 해석. 시행 첫해 현지 공시에 산지 피해 수치가 실리면 둘째 문장의 읽기는 틀린다.

Responsible Investor (영국, 11월)

이슈 7 케냐 KOKO 파산, 상대국의 이전 감축량 몫이 먼저였다

물 기술 회사 대표가 쓴 ESG Today 기고 한 편에 기댄 해석. 케냐가 배정분 한도와 상관없이 다른 대형 사업에 이전 승인을 내주면 한도가 거절의 핵심이라는 읽기는 약해진다.

ESG Today (미국, 11월)

이슈 8 일본 배출권, 15% 넘긴 이월은 뒤 할당에서 뺀다

경제산업성 소위원회 사무국안을 다룬 Sustainable Japan 보도(무료 공개 부분)에 기댄 아이디어. 확정안에서 상한이 빠지거나 깎는 방식이 바뀌면 비교의 쓸모는 작아진다.

Sustainable Japan (일본, 11월)

이슈 9 HSBC, 외부 ESG 평가 하나로 대출 조건을 정한다

HSBC 상품을 다룬 Sustainable Japan 보도(무료 공개 부분)에 기댄 아이디어. 국내에서 외부 평가를 대출 조건에 쓰는 데 제약이 있다면 이 설계는 당장 빌리기 어렵다.

Sustainable Japan (일본, 11월)

이슈 10 이탈리아 은행재단, 저렴한 주택과 기숙사에 가장 많이 들어갔다

두 이탈리아 매체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올해 조사가 주거를 중점으로 물어 숫자가 커 보일 수 있고, 국내 공익법인 규정이 주거 투자를 막으면 첫 걸음은 규정 검토다.

Vita (이탈리아, 11월) · ESG News (이탈리아, 11월)

이슈 11 검증비 2,000만 원이면 1,000톤을 팔아야 본전이라는 셈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 인터뷰에 기댄 아이디어. 검증비 2,000만 원과 톤당 2만 원은 둘 다 인터뷰가 든 가정이라, 실제 검증비나 값이 크게 다르면 계산의 결론은 달라진다.

임팩트온 (한국, 11월)

이슈 12 은행 61곳, 플라스틱 오염 상위 4사 대출 2,190억 달러

ExpokNews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캠페인 단체 보고서이고, 대출마다 플라스틱 생산이 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기사도 밝혔다. 은행 쪽 반론이 나오면 해석은 달라진다.

ExpokNews (멕시코, 11월)

작성자: 문화미래기획자 정헌영 & AI. 인용한 자료는 저작권 기준을 준수했습니다.